

##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실태와 정부·기업·국민의 실천과제

한 상 춘 <대우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장>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국민의 경쟁력 강화노력에서 출발된다. 국민들은 생산면에서는 근로자로서, 소비면에서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창조적인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89년 이후 93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은 절대금액면에서 감소됨에 따라 양대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94년 이후에는 대미 및 대일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하였으

나, 양대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88년 이후 지난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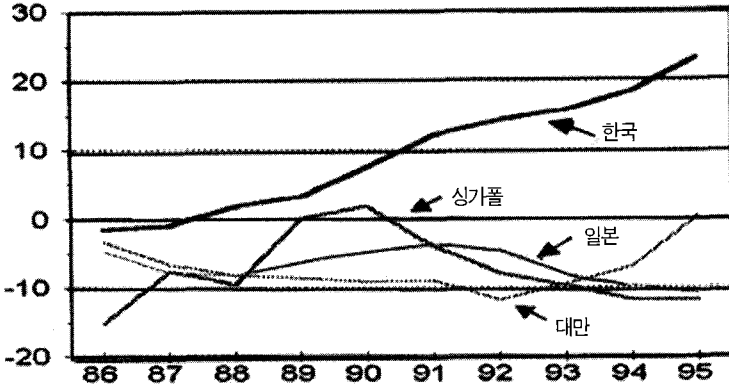
지 시장점유율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우위를 지켜왔던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후발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급격히 추격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국에 대한 수출구조의 유사정도를 비교하여 수출 혹은 경쟁력의 경합관계를 파악하는 수출경합도지수(ESI)를 시산해 보면,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수출주력업종이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전기 전자, 기계류 등 중화학제품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와의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다.

### 경쟁력 약화 원인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이처럼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체질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부문별로 경쟁국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우리 기업의 재료비 부담은 경쟁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1〉 경쟁국별 재료비 누적변동률 추이(%)



주 : 재료비 변동률은 각국의 도매물가에서 산정함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우리 기업의 재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고물가로 86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까지 약 25% 이상 상승했으나,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물가안정으로 86년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노동비용은 86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높은 임금상승으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

〈표-1〉 우리나라의 주요국간의 수출경합도지수(ESI) 추이

구 분		90년	92년	93년	94년	95년
미국시장	말레이시아	51.9	61.7	64.4	67.7	71.6
	태 국	64.2	66.5	69.8	67.8	66.0
	멕시코	56.6	60.2	60.7	67.6	65.9
일본시장	말레이시아	21.2	31.3	31.6	41.6	45.2
	태 국	41.0	45.5	46.0	46.4	48.3
	필 리 핀	36.3	44.1	48.0	50.4	53.4

주 : 수출경합도지수 (ESI : Export similarity Index)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 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하에 특정시장에서의 양국간의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ESI(ab, c) = Min (Xi(ac), Xi(bc)) × 100 단, Xi(ac), Xi(bc)는 a, b국의 c국에 대한 수출상품 i의 비중.

〈표-2〉 경쟁국별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 비교

(달러)

구 분	일 본	홍 콩	대 만	싱 가 폴	중 국	한 국
월평균 임금(A)	3,705	978	1,165	1,240	61	1,273
1인당 GNP(B)	37,314	20,050	11,629	16,720	337	8,483
(A × 12) / B	1.19	0.58	1.20	0.89	2.17	1.80

주 : 94년 기준임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표-3〉 경쟁국별 기업의 재무구조 및 금융비용 부담률 비교 (%)

구 분	미 국	일 본	대 만	한 국	
	94년	94년	94년	94년	95년
자기자본 비율	37.5	32.3	53.4	24.8	25.9
유동 비율	139.4	131.8	124.9	94.6	95.4
고정 비율	172.9	142.6	107.1	220.2	212.5
금융비용부담률	-	1.6	1.7	5.6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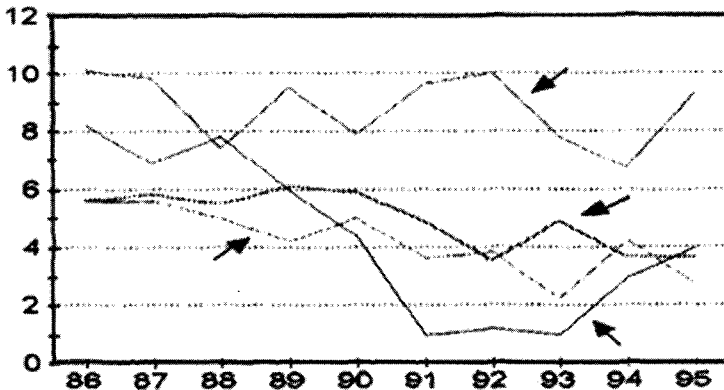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96년 5월 일본대장성, 재정효율통계월보, '95년 8월  
 대만은행, 중화민국대만지구 공업재무상황소비 U · S Department of Commerce,  
 U · S Department of Commerce, Quarterly Financial Report, '95 4/4분기

〈표-4〉 95년 여신종류별 은행 순이익률 실태 (%)

구 분	대출대상	대출이자율	순이익률
은행계정	대 기업	9.0	-2.35
	중소기업	13.0	1.64
신탁계정	대 기업	9.75	-2.05
	중소기업	13.75	1.95

자료 : 중소기업 연구원, 중소기업동향과 정책과제, 96년 6월

〈그림-2〉 각국의 실질금리 변화추이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용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을 감안한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9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1,273 달러로 연간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1.80배로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 1.19배, 대만 1.20배, 싱가포르 0.89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임금과 부가급여(fringe benefit)를 합친 시간당 보수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리자유화, 통화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9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기준)는 9.3%로 대만 3.6%, 일본 2.7%, 싱가포르 3.9%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25.9%, 단기자금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95.4%로 나타나 일본, 대만 등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고정비율은 212.5로 1.5~2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출액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율은 5.6%로 일본 1.6%, 대만 1.7%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격차가 지속되어 왔으며, 금리자유화 추진과 함께 이같은 추세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의 외형 위주의 출혈수신 경쟁과 유가증권투자 실패 및 역마진을 감수한 대기업 대출에서 입을 손실을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충당하려는데 기인한 것이다. 더욱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이같은 표면금리 이외에 담보설정비 1%, 지급보증수수료 1%, 꺾기비용 1~2%까지 가산

할 경우 실제 부담금리는 20.5~2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장기설비자금조달도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발행총액과 회사채 발행총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중 각각 14.9%, 24.7%에서 95년에는 7.4%, 11.2%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넷째로는 우리나라는 92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상업용 토지가격은 86년을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2.3배 가량 상승한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버블붕괴와 같은 특수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국가가 86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부문의 경쟁력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인 공업단지의 분양가격은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에 비해 2~2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기업이 공장입지 등 토지를 이용할 경우 현행 120개가 넘는 토지관련법령의 각종 인허가 절차로 과도한 규제비용이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관련세제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정책세제로 운용됨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표-5〉 세계 주요공단 분양가

(\$ / m<sup>2</sup>)

미	국	영	국	일	본	홍	콩	중	국
Airport 비즈니스센터 (캘리포니아)	Westport 무역지대 (텍사스)	Baglan 공단		이카키요시 마중핵공업 단지		Taipo 공단		靑島 경제기술 특별구	
5 ~ 10	13.46	22.4		195.6		174.8		9.2~25.3	
태	국	말	련	필	리	핀	인	도	네
Rayong 공단	Pontian 공단	Lagima 공단		Bekasi 공단		외국인전용공단 (광주)		명지녹산공단 (부산)	
47.7	48.44	46.1		43.1		107.1		226.8	

자료 : 일본, 자국 자료(KOTRA 수집)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공업입지센터), 공업입지뉴스레터, 제33호, 95년 10월 기타, 대한상공회의소(공업입지센터), 세계주요공업단지, 94년 2월

〈표-6〉 주요 경쟁국의 물류비 비교 (%)

기 준		미 국	일 본	한 국
GDP 대비	산업 평균	10.5	8.8	15.4
매출액 대비	제조업	12.4	14.5	17.4
	산업 평균	7.0	11.0	17.0

주 : 93년 기준임    자료 : 제13차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 확대회의 자료, 95년 11월

다섯째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이 적정능력을 초과하여 체증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로에 있어서는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이 10m에 불과해 미국의 33m, 독일의 16.1m, 영국의 14.9m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항만하역 시설능력도 세계 주요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항만하역 시설능력을 알 수 있는 선석당 생산성(화물처리량/시간)은 우리나라의 부산항이 39.7만 TEU인데 비해 미국의 롱비치항은 63.3만 TEU, 싱가포르 49.7만 TEU, 홍콩 57.4만 TEU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은 금융비용과 함께 우리나라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93년 기준으로 GDP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15.4%로 미국 10.5%, 일본 8.8%에 비해 1.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93년 신정부 출범 이후 관민이 합심이 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온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수출부진이 부진하고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도 제조업보다는 음식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 위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고비용-저효율]에 따른 국내 생산여건

의 악화로 무차별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여 최근에는 산업공동화와 실업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경쟁력 강화방안

따라서 향후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과 국내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유기적인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시장통제면에서 평가대상 46개국중 45위, 경쟁환경 조성면에서 46위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시장에 대한 규제가 경제전반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신속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영전략 수립이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 향후 정부는 최소한의 [게임의 룰]을 간여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핵심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 완화가 부진한 것은 핵심규제 사항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데다,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부처의 권한유지 속성, 기업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①행정규제를 법정기한내 처리하는

[자동의제 처리제] ②법국민적 행정규제 완화기구 설립 및 국민이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 ③행정규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 제도의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원칙자유 예외금지]의 내거티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로베이스 차원의 행정규제 정비작업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 및 경쟁정책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위주로 이루어져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동태적 유효경쟁 촉진보다는 특정기업의 보호에 치우쳐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의 기초를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책에서 유효경쟁을 촉진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각종 인허가 규제와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폐지하되, 별도의 경쟁촉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 현행 업종전문화 정책의 경우 시장의 경쟁압력이 증대되면 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전문화될 것이므로 수직계열화를 통한 전문화 등과 같은 경쟁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직하다.

## 기업의 대응자세

다음은 기업의 입장에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은 외부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속한 정보와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근로자 복지강화를 통한 노사분규 등 경영불안정 요소를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과 문화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이다. R&D 지출증대, 고급기술인력 양성, 해외핵심기술 인력과의 교류 및 부설연구소의 해외진출 시도하여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고, 전략적 제휴과 기업간

기술공유 및 공동개발 추진을 통해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독자기술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현행 우리 기업의 원가절감과 단순한 품질개선 노력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셋째로는,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행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합리적인 교섭관행의 정착 및 기업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노사간의 대화풍토를 조성하고 사전적 예방적인 조정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노조활동도 현재처럼 분배를 둘러싼 제로섬(zero-sum) 게임에서 생산을 위한 포지티브섬(positive sum) 게임으로 의식을 전환하되, 경영자는 이러한 체제의 정착을 위해 근로자의 능력과 기업의 경영성과와 연계된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노동 관련 제도를 개혁하여 변형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파견근로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국민의 경쟁력 강화노력에서 출발된다. 국민들은 생산면에서는 근로자로서, 소비면에서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창조적인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합리적인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면에서는 「魂」이 담긴 제품생산과 강한 근로의욕을 보유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면에서는 과시적인 소비행태나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소비보다는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유지해야 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로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후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social consensus)를 형성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